

형소법 기본서

(신정8판 1쇄)

[추록]

(속표지)

형사소송법 신정8판 1쇄에 대한 추록

1 p.10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86도403]와 3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6507] 순서변경

2 p.11

상단 - 기존 판례 [대법원 2011도6507] 내용 다음에 판례 추가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2016도17465) (17.7급국가)

3 p.17

(2) 제도적 표현 - 증거의 수집·보전 박스 아래 주의 추가

주의 ...영장주의 (×) (12.경찰승진, 17.해경승진)

→ **주의** ...영장주의 (×) (12.경찰승진, 17.해경승진), 결석재판제도 (×) (17.해경2차)

4 p.26

2. - (2) 탄핵주의 - 구분 박스 아래 2번째 Tip 추가

Tip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18.9급국가·개론)

5 p.29

직권주의 요소 - ⑤ 내용 다음에 주의 추가

주의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주의** 공소장일본주의 (×) (18.9급국가·개론),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6 p.34

중단 - 판례[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에 ...(대법원 2003모126)] 삭제

7 p.36

1번째 판례[대법원 2005도1247]의 Tip 내용 다음에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 (17.9급국가)

8 p.37

4번째 판례[[2]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의 Tip 추가

Tip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私人)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부탁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9급개론)

9 p.58

하단 – 판례[대법원 98도2074]의 4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고소능력이 없다. (×) (18.해경특채1차·해경승진)

10 p.61

2번째 판례[대법원 2000도4595]의 2번째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8.순경1차)

11 p.66

2번째 판례[대법원 93도1689]의 일부 내용 추가

형사소송법이...볼 것이다. (대법원 93도1689)

→ 형사소송법이...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도1689) (18.순경1차·해경승진)

2번째 판례[대법원 93도1689] 내용 다음에 판례 추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도8417) (17.순경2차)

12 p.68

8. 고소의 취소 – 취소 방식 – ①의 주의 추가

주의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하다. (×) (18.해경간부)

13 p.70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한 판례 – 1번째 판례[대법원 2001도6777]의 Tip 추가

Tip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18.해경간부)

14 p.72

10. - (2) 내용 일부 수정 및 2번째 Tip으로 추가

(2) 다만...(성폭력특례법 제17조...) → (2) 다만...(성폭력특례법 제18조...)

Tip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18.법원)

15 p.79

2. 구별기준 - 본문 내용 다음에 주의 추가

주의 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X) (18.해경승진)

16 p.82

4번째 판례[대법원 2013도7718]의 주의 추가하고 그 다음에 판례 추가

주의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X) (17.9급국가)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도8719)

17 p.84

중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3도958]의 Tip 추가

Tip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18.9급국가·개론)

18 p.92

상단 - 판례[대법원 2008모793] 위로 아래 판례를 1번째 판례로 추가

변호인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상단 - 기존 판례[대법원 2008모793] 내용 다음에 판례 추가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후방 착석 요구행위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18.9급국가·개론)

19 p.93

상단 - 진술거부권 - 1번째 주의를 아래 주의로 교체

주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7.해경특채차)

20 p.95

2. 종류 - 주체 - ①의 Tip 추가

Tip 소환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강제처분이다. (18.해경승진)

대상 - ②의 주의 추가

주의 피의자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 (18.해경승진)

정도 - ②의 주의 추가

주의 소환은 직접강제에 해당하나 제출명령은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 (18.해경승진)

21 p.98

중단 - 판례[[2] 검사의 체포영장...]의 Tip 추가

Tip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9급개론)

22 p.99

압수·수색·검증 박스 삭제

압수·수색·검증	체포영장을...(제216조) (16.해경간부)
----------	---------------------------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99도4341] 다음에 판례 추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7도10866)

23 p.101

하단 맨 아래 Tip[긴급체포는 다액...] 다음에 주의 추가

주의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 (11.경찰승진, 17.해경특채차)

24 p.103

상단 - 2번째 판례[대법원 2005도7569] 다음에 판례 추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원 2016도5814) (17.9급개론)

4. 절차 - 압수·수색·검증 박스 삭제

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사에는...있다. (13.경간)
----------	-----------------------

긴급체포서 작성- 아래 내용으로 교체

긴급체포서 작성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13.9급국가,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경찰승진)</p> <p>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4항) (17.순경2차)</p> <p>주의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p> <p>주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나,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18.해경승진)</p>
----------	--

25 p.105

석방보고 및 통지 - 2번째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11.경찰승진, 18.해경승진)

재체포의 제한 (영장 필요)의 Tip과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 Tip**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증거를 인멸할 경우도 불가
- Tip**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다. (18.해경승진)
- Tip**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다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0.7급국가)
- 주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 (11.경찰승진, 15.순경3차, 17.해경특채1차)
- 주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한다. (×) (12.교정특채)
- 주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 주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 (11.9급국가, 16.해경3차)
- 주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할 수 없다. (×) (18.순경1차)

26 p.106

2번째 판례[[3]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2번째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 (11.순경2차, 17.경간)

27 p.108

1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4763] 내용을 아래 판례로 교체 (Tip은 그대로 유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다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도19907) (17.7급국가)

28 p.109

상단 - 경미범죄 특칙 - 1번째 주의 내용 일부 수정

주의 다액 300만원 이하... → **주의** 다액 100만원 이하... (18.경간)

29 p.110

3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7193] 내용 다음에 판례 추가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도2168) (17.7급국가)

30 p.117

심문방법 - ② 심문사항 - ㉔의 주의 추가

주의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18.경찰승진)

31 p.120

2번째 판례[대법원 2000모134]의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 (17.9급국가)

32 p.123

(2) 피고인의 구속기간 - 구속기간 - ②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심급마다 1개월 단위 (×) (18.경간)

33 p.124

(3) 기산점 - ②의 주의 내용 일부 수정

주의 현행범으로 체포된...기산한다. → 주의) 현행범으로 체포(긴급체포)된...기산한다.

34 p.125

9. 재구속의 제한 - 피의자 구속 - ②의 주의 추가

주의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 (18.경찰승진)

35 p.128

V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 - 의의 - ①의 Tip 다음에 주의 추가

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함은 수사기관 또는 사인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36 p.131

상단 - 심사법원 - ②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8.9급개론)

의견진술 - ②의 Tip 추가

Tip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법원)

국선변호인 - 3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 (18.법원)

37 p.132

전격기소 -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18.9급개론)

38 p.133

(2) 절차 제목을 수정

(2) 절차(적부심 청구) → (2) 구속적부심 청구

39 p.134

대상자 - ① 내용 일부 삭제 및 ② 내용 일부 수정

① 권해의 대립이 있으나 형사소송법이...입장이다. → ① 형사소송법이...입장이다.

② 구속적부...피고인은 보증금... → ② 구속적부...피고인도 보증금...

대상자 - ①의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18.9급개론)

40 p.144

10. - 필요적 물취 - 주의 추가

주의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18.9급개론)

41 p.146

5. 관련문제 - 감정유치 - ①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된 경우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18.경찰승진)

42 p.148

피고인 구속취소 - ① 내용 일부 수정

① 구속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취소하여야 한다.

→ ①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취소하여야 한다.

43 p.153

3번째 판례[대법원 2013도16162]를 아래 판례로 교체

- [1]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접견교통권이 그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경간)
- [3] 피해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 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하던 지휘관으로서 체포된 근로자를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인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도16162) (17.7급국가)

44 p.154

판례[[1] 헌법재판소가 9헌마...]의 주의를 아래 주의로 교체

주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 (14.순경2차,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45 p.156

1번째 판례[대법원 2000모112]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하는 것 역시 담당 교도관이 소송서류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징표이자 구치소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서류나 외부에서 구치소로 반입되는 서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헌마243) (17.순경2차)

46 p.158

관련 판례 처음에 제목 추가

관련판례 : 침해 ○

4번째 판례(헌법재판소 2015헌마243)를 판례 제목을 “침해 ×”로 한 후에 p159 2번째 판례(대법원 2003다50184) 다음으로 이동

관련판례 : 침해 ×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할 뿐 영상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헌마243)

47 p.159 상단

3번째 판례(대법원 90도1586)를 p160 1번째 판례(대법원 90도1285) 다음으로 이동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90도1586) (09.경찰승진)

48 p.162

1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1839 전합]를 아래 판례로 교체

-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12.9급국가, 13.7급국가, 15.경찰승진·해경3차, 16.순경1차·9급국가, 17.순경1차, 18.경찰승진)
- Tip**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18.경찰승진)
- 주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7.순경2차)
- 주의**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 (18.경찰승진)
- [2]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15.해경3차, 16.순경1차·9급국가·개론·법원·7급국가·해경3차, 17.순경1차)
- 주의**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은 반드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 (13.7급국가)
- [3]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9도1190)

2번째 판례[[1]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된다.] 내용을 삭제하고 번호 정리

49 p.164

판례[대법원 2011도1839 전합] 다음에 판례 추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도13263)

- [1]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도9747)

하단 - 군사상 비밀 - ①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군사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18해경승진)

50 p.165

상단 - 업무상 비밀 박스 아래 주의 추가

주의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통신상 비밀이 있다. (×) (18해경승진)

5. 압수·수색의 요건 - 사건관련성 - ② 내용 일부 수정

② 검사 또는...한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 ② 검사 또는...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17.9급국가)

51 p.166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13도7101] 내용 위에 판례 추가

-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3458)

52 p.169

상단 - 2번째 판례[대법원 2014도10978 전합] 다음에 판례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함에 있어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일부 기각 취지 부분 등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도12400)

하단 - 판례[대법원 2008도763] 다음에 판례 추가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도10648)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3263)

53 p.171

7. 압수·수색과 참여 - 성년의 여자 참여 박스 - 다음에 판례 추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도7455) (17.7급국가, 18.해경승진)

하단 - (2)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 ① 내용 일부 수정

① 도박, 기타 풍속... 인정하는 장소

→ ① 도박, 기타 풍속... 인정하는 장소(공개된 시간에 제한 받지 않음)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54 p.175

중단 - 판례[대법원 2008도2245] 다음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도10309)

55 p.176

사후 영장 -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18.해경간부)

1번째 판례[대법원 83도3006] 다음에 판례 추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도16080)

3번째 판례[[1] 수사기관이...]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 (18.9급국가·개론)

56 p.177

3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10092]의 Tip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Tip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는 위법하다. (17.9급국가)

57 p.178

상단 - 판례[대법원 2013도11233]를 p552 2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2094] 다음으로 이동 (추록 p31 143번(p522) 참고)

58 p.180

상단 - 1번째 판례[[1] 형사소송법....]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18.경찰승진)

59 p.184

4번째 판례(대법원 2003도705)를 1번째 판례(대법원 94모51 전합) 다음으로 이동

60 p.187

1번째 판례(대법원 2004도5257)를 보충판례 p19 통신제한조치 위로 이동

2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2109]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 (17.9급개론, 18.해경특채1차)

61 p.190

1. - 의의 - 본문 내용 일부 수정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을 감청 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62 p.191

하단 - 4. - 집행(제9조) - ③ 내용 추가

③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17.9급국가, 18.경찰승진·해경간부)

63 p.192

1번째 판례[대법원 2001도6213] 내용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도19843)

기존 2번째 판례(대법원 2014도10978 전합) 다음에 기존 5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4644)와 p193 1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7455) 이동

기존 5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4644]의 Tip 추가

Tip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17.9급국가, 18.해경승진·해경간부)

64 p.205

상단 - 각하 박스 - 아래에 5, 6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혐의 없음으로 송치 (×) (18.경간)

주의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 (18.경간)

65 p.211

2. - 대상범죄 - ②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18.해경승진)

66 p.212

2번째 판례[대법원 98도127] 다음에 판례 추가

법정기간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재정신청절차가 형사재판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 법정기간 내의 도달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형사소송법상의 제도 및 신속한 특급우편제도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도2347)

주의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7.9급국가·개론)

67 p.213

(3) - 취소 - ③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 (18.경찰승진·해경승진)

68 p.215

상단 판례 순서 변경하고 아래 판례를 4번째 판례로 추가

3번째 판례(90모58) → 2번째 판례(97모30) → 1번째 판례(66도122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4755) (18.경찰승진)

주의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

69 p.216

상단 판례(헌법재판소 2008헌마578)를 p215 하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1090) 다음으로 이동

하단 - 기존 2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224] 다음에 판례 추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3465)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10일)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없다. (대법원 2013도16162) (17.7급국가)

70 p.220

헌법소원 청구 가능 - 1번째 판례[헌법재판소 2008헌마399]의 주의 추가

주의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7.9급국가)

71 p.222

피고인 구속 - 2번째 주의를 아래 주의로 교체

주의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2.경간, 17.7급국가)

압수·수색·검증 - 예외적 허용 - ②의 주의 추가

주의 공소제기 후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 (17.7급국가)

압수·수색·검증 박스 아래에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72 p.223

III - 원칙적 허용 - ①의 Tip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Tip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12.경간,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18.해경승진)

73 p.224

2번째 판례[대법원 99도1108 전합]의 2번째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17.7급국가)

74 p.234

1번째 판례[대법원 2001도3026]의 Tip 추가 및 2번째 주의로 추가

Tip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18.법원)

주의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18.9급국가·개론)

1번째 판례[대법원 2001도3026]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확정된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단지 고소인의 개인적 감정에 영합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할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이 사건 제2차 고소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기록 검토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도5423)

75 p.235

5. - 학설 박스 다음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도1613) (17.법원, 18.해경승진)

76 p.239

상단 - 2번째 판례[[2] 검사가 공소사실의...]의 주의 추가하고 판례 추가

주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X) (17.9급국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7052) (17.9급국가, 18.9급국가·개론)

77 p.240

불특정 효과 - ㉔ - ㉕ Tip을 p241 1번째 판례(대법원 2004도5972) Tip으로 이동

78 p.242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 2번째 판례(대법원 2006도48)를 p244 1번째 판례(대법원 94도1680)위로 이동 (추록 80번 참고)

79 p.243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4도3297]를 아래 판례로 교체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도19186) (17.9급국가, 18.9급국가)

80 p.244

1번째 판례(대법원 94도1680)위로 p242 2번째 판례(대법원 2006도48)를 이동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 경 사이'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도48) (11.9급국가, 18.해경승진)

81 p.253

1. 의의 - ①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18.9급국가)

82 p.258

하단 - 판례[[2] 그러나 공소장...]의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X) (17.9급국가)

83 p.262

하단 - 판례[대법원 90도1977] 내용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3448) (18.법원)

84 p.269

하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8도1438]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8.해경간부)

85 p.270

마지막 판례[대법원 74도1676] 다음에 판례 추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이 사건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 또한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이 사건 공소사실)와 질서위협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는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도11679)

86 p.273

4번째 판례[대법원 90도1694] 다음에 판례 추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도 미치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8118) (17.7급국가)

87 p.282

변경필요 원칙 - 1.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 ㉠ 내용 다음에 내용 추가

㉠ 권리행사방해죄 → 배임죄(대법원 2017도4578)

88 p.284

변경 불필요(예외) - 1. 축소사실 인정 - ㉡ 내용 다음에 내용 추가

㉡ 업무상과실치상죄 → 과실치상죄(대법원 2016도16738)

89 p.287

하단 - 4번째 판례[대법원 99도3674] 다음에 판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도564)

90 p.293

1번째 판례[대법원 96도1231] 내용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16도14820)

91 p.294

6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875] 다음에 판례 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개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도346) (17.9급국가·개론)

92 p.295

2. 공소시효 정지사유 - 제목 옆에 있는 주의 모두 삭제

2. 공소시효 정지사유 - 공소제기 박스 아래에 주의 추가

주의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17.해경2차)

주의 검찰항고의 제기 (X), 재심청구 (X) (04.순경), 관할위반판결의 확정 (X) (02.순경3차)

93 p.296

하단 - 판례[[1] 공소시효 정지에...] 위로 판례 추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157)

94 p.299

2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15137] 주의 추가

주의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17.9급국가·개론, 18.경찰승진)

95 p.300

공소시효 연장 - ①의 Tip 추가

Tip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소시효 연장 - ②의 Tip 추가

Tip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소시효 연장 - ② 다음에 아래 내용을 ③으로 추가하고 번호 정리

③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공소시효 연장 - 기존 ③의 내용을 ④로 수정하고 Tip 추가

Tip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소시효 배제 - ①의 2, 3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18.9급국가)

주의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을 포함한다) (×) (18.경간)

96 p.308

4. - (1) - ① - 합의부 관할 - ㉔ - Tip - 해당 O 본문 다음에 내용 추가

... 현주건조물방화(3년이상) → ... 현주건조물방화(3년이상), **상습특수상해(1년이상)**

97 p.314

상단 - 토지관할 병합심리 - ①의 2번째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X) (18.경간)

98 p.316

(2) - 지정신청 - ①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18.경철승진)

99 p.321

중단 - 판례[대법원 67도1526] 다음에 판례 추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16초기318 전합)

주의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17.7급국가)

100 p.327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01도7095], 2번째 판례[대법원 99도155] 삭제

제1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아래 판례를 상단 1번째 판례로 추가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3534) (17.9급개론)

Tip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경질되어 판결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18.법원)

101 p.333

5. - 절차 - ①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주의는 그대로)

①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 (간이각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25조 제2항) (04.순경3차, 18.9급개론)

102 p.339

공동피고인 - 소송관계 - ③ 내용 수정

③ 다만, 피고인을...한다. (제364조의2) (08.9급국가...13.경간)

→ ③ 다만, 피고인을...한다. (제364조의2, 제392조) (08.9급국가...13.경간, 17.7급국가, 18.순경1차)

103 p.349

2. - (2) - 진술강요 금지 - ①의 2번째 Tip을 ②로 하고 번호 정리

Tip 따라서 진술이 아닌...않는다. (02.경찰승진...13.경간)

→ ② 진술이 아닌...않는다. (02.경찰승진...13.경간,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기존 ②의 내용[진술에는 구두진술...] 다음에 Tip 추가

Tip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104 p.370

제33조 - 청구 - 주의 추가

주의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105 p.371

5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18103]의 Tip 추가

Tip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18.9급국가·개론)

7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4629) 다음으로 p373 1번째 판례(대법원 96도3059) 이동 및 그 다음에 판례 추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96도3059) (01.경찰승진, 08.순경2차, 11.경찰승진, 16.9급국가, 17.해경승진)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6도7622) (17.9급국가·개론)

106 p.373

1번째 판례(대법원 96도3059)를 p371 7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4629) 다음으로 이동 (추록 p24 105번 참고)

기존 7번째 판례[대법원 90도1571] 다음에 판례 추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3도351)

107 p.397

하단 - 1번째 판례[대법원 69모68]의 주의 추가

주의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 (18.9급국가)

108 p.411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08모630] 다음에 판례 추가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향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향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향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재향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모1680)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모2162)

109 p.413

법원보관서류 - ①의 주의 추가

주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17.7급국가)

110 p.416

확정판결서 등 - ③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고의 또는 과실 (×) (18.법원)

111 p.418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2013도7987]의 Tip 추가

Tip A와 B가 2012. 3. 1. 함께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A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8법원)

112 p.424

법정촬영 녹음 - ②의 주의 아래 ③ 추가

③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113 p.427

의의 - 본문 내용 다음에 Tip 추가

Tip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

114 p.431

소재불명 - ①의 Tip ㉔ 내용 일부 수정

㉔ 피고인이...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있다.(소속규칙 제18조, 제19조)
→ ㉔ 피고인이...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2회 공시송달) 피고인의...있다.(소속규칙 제18조, 제19조)
(18.9급국가)

115 p.432

중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16166]의 주의 추가

주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는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시 불출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있다. (×) (18법원)

116 p.444

(1) 의의 및 도입취지 - 취지 - ② 내용 일부 수정

②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117 p.446

제한 - ②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18.9급국가·개론)

118 p.456

(6) - 의의 - 본문 일부 내용 수정

검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 검사...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17.9급개론) 법원은...

법원의 결정 - 기각결정 박스 위에 내용 추가

법원의 결정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이의신청이 있는 후 즉시 하여야 한다.(규칙 제138조)
--------	----	--

119 p.458

3. - 검사의 의견진술 - ④(Tip과 함께)와 ⑤ 내용 순서 변경

120 p.463

(2) - 의의 - ②의 Tip 내용 일부 수정

Tip 책임무능력자나...피고인의 친인척도 모두 인정된다. (10.경찰승진)

→ **Tip** 책임무능력자나...피고인의 배우자, 친인척도 모두 인정된다. (10.경찰승진, 18.9급개론)

(2) - 검사 - ②의 Tip 추가

Tip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 (18.9급개론)

121 p.464

3번째 판례[[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별개의 재판에서 이미 당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다. (18.9급개론)

122 p.465

증인소환 - ⑤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 (18.해경승진)

123 p.470

1번째 판례[대법원 4290형상23] 위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2816) (17.7급국가)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도10028) (17.7급국가, 18.해경승진)

124 p.489

Ⅳ. - (2) 본문 다음에 판례 추가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2도1284) (18.9급국가)

125 p.493

하단 - 완화 범위 - 증명력 - 1번째 주의를 아래 주의로 교체하고 3번째 주의[자백배제법칙과...]는 삭제

주의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03.순경3차, 15.지능특채, 17.해경2차)

126 p.502

하단 - 판례[헌법재판소 2008헌바12]의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8.해경간부)

127 p.503

하단 - 3. 필요적 국선번호 내용 및 주의를 모두 삭제

128 p.514

1. - 필요적 절차 - ①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①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11.법원.....17.법원·9급개론, 18.해경간부)

예외 박스 삭제

예외	공판준비절차에 부쳐가...의한다. (11.법원)
----	----------------------------

129 p.515

기타 - ② 다음에 주의 추가

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16.경간)

130 p.517

하단 - 양형토의 - ①의 주의 추가

주의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17.9급국가·개론, 18.해경승진)

131 p.520

II - 1. - 증거방법 - ② 내용 및 주의 추가

②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피고인 등

→ ②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18.해경승진), 의사의 상해진단서 (18.해경승진), 공판조서 (18.해경승진), 피고인 등

주의 피고인의 진술 (×) (18.해경승진)

132 p.527

2번째 판례[대법원 2008도8486] 다음에 판례 추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축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도1549)

주의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축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18.9급국가)

133 p.529

5번째 판례[대법원 2013도8121] 다음에 판례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및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뿐이다. 반면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법적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도9027)

134 p.531

하단 - 판례[대법원 73도289] 다음에 판례 추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7112) (17.9급국가)

135 p.532

5. - 소송법적 사실 - ②③ 내용 일부 추가(밑줄 부분 추가)

②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 공소제기...

→ ②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③ 자백의 임의성,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 ③ 자백의 임의성, 특신상태,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136 p.536

하단 - 4번째 판례[대법원 2000도1743] 다음에 판례 추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7도13263)

137 p.537

하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5도1473]의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은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X) (17.9급국가)

138 p.541

2번째 판례[대법원 96도3069] 다음에 판례 추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도16121)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도16121)

139 p.542

3번째 판례[대법원 2002도4220] 다음에 판례 추가

- [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도661)

140 p.544

1. - 의의 본문 내용 아래 Tip 추가

Tip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141 p.546

위법수집증거 해당 O - 2번째 판례[대법원 2000도5701] 다음에 판례 추가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甲, 乙 간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도6717) (18법원)

142 p.551

2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13611)를 p552 2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2094) 다음으로 이동

143 p.552

기존 2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2094] 다음에 판례 추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도11233) (16.7급국가, 17.법원, 18.9급국가·개론)

144 p.553

하단 - 판례[대법원 94도2865] 내용 일부 수정

...(대법원 94도2865) → ...(대법원 94도2865 전합)

145 p.554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4도2865 전합]의 주의 추가

주의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 (18.경간)

146 p.559

중단 - 2번째 판례[대법원 83도712]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 (×) (16.7급국가)

147 p.560

상단 - 판례[대법원 92도682]의 주의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주의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17.복부여경)

중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0도1586]를 p160 1번째 판례[대법원 90도1285] 다음으로 이동

148 p.563

상단 - 의의 - ①의 1번째 Tip을 아래와 같이 교체

Tip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01.경찰승진, 18.해경승진)

Tip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18.해경승진)

Tip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18.해경승진)

149 p.564

(3) 전문증거의 범위 - 요증사실관련성 - ②의 1번째 Tip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하고 3번째 Tip 다음에 주의 추가

Tip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17.복부여경, 18.경간)

주의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18.9급국가·개론)

150 p.566

2번째 판례[대법원 2007도3906]와 3번째 판례[대법원 2015도2275] 순서 변경

151 p.568

의의 - ①의 아래 내용을 2번째 Tip으로 추가

Tip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18.9급개론)

152 p.574

1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8325]의 주의 추가

주의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8.법원)

153 p.577

3.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을 아래와 같이 교제

3.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

(1)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 조사 신청(규칙 제134조의2)
 - ㉡ 검사는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 피의자의 신분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 ㉦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 ㉧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 ㉨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 ㉩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 ㉪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경찰승진)
 - ㉭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7.경찰승진)
 -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 신청(규칙 제134조의2)
 - 위 ㉠의 ㉡, ㉢, ㉣항을 준용한다.
- 주의**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법원, 13.경찰승진, 17.경찰승진)
-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규칙 제134조의3)
 - ㉰ 검사는 신청을 함에 있어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위 ㉠내용 중 ㉡(㉢제외), ㉢, ㉣항은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 내용 중 ㉡항은 준용하지 않음)

(2)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규칙 제134조의5)

- ㉲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의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2.법원)
- ㉳ 위 ㉠ 내용 중 ㉡, ㉢, ㉣항은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에 준용한다.

154 p.578

5. - ②의 Tip 추가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18.9급개론)

155 p.580

상단 - 1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2865]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18.9급국가·개론)

156 p.581

상단 - ②의 주의 내용[내용의 인정이란...] 삭제

157 p.586

1번째 판례[대법원 99도2317]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기존 주의를 그대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도3504) (18.경찰승진)

2번째 판례[대법원 2007도7257] 다음에 판례 추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그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문서파일의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3467) (17.7급국가)

158 p.597

특신통화에서 작성문서(제3호) - 내용 일부 추가

⑪ 민사판결문 사본 (18.해경승진)

159 p.599

8번째 판례[대법원 2011도5459] 다음에 판례 추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2671) [\(18.법원\)](#)

160 p.601

특신상태 - 본문 내용 다음에 Tip 추가

Tip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18.9급개론\)](#)

161 p.604

1번째 판례[대법원 2005도5461]와 2번째 판례[대법원 2006도2556] 순서 변경

162 p.607

1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7461]의 Tip 추가

Tip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7.7급국가\)](#)

163 p.610

1번째 판례[대법원 2002도123]의 Tip 내용 추가 및 기출표시 추가

Tip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깃발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12.경찰승진, 18.해경승진\)](#)

Tip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12.경찰승진, 18.해경승진\)](#)

Tip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경찰승진, 18.해경승진\)](#)

3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9016] 다음에 판례 추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3도15616)

주의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17.7급국가, 18.해경특채차-해경승진\)](#)

164 p.615

3번째 판례[[2] 증거공통의...]의 주의 추가

주의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18.해경승진)

165 p.618

3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15977]의 주의 추가

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17.7급국가)

166 p.619

하단 - 시간적 범위 - Tip 추가

Tip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8.법원)

167 p.620

상단 - 판례(대법원 2007도5776)를 하단 1번째 판례로 이동하고, 하단 - 기존 1번째 판례(대법원 83도1019)를 3번째 판례로 이동 (하단 관련 판례 순서)

대법원 2007도5776 → 대법원 99도2029 → 대법원 83도1019

168 p.627

범인 식별 관련 4개 판례 모두를 p630 (5)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위로 이동

169 p.628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 3번째 판례[대법원 2008도8486] 다음에 판례 추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도14222)

170 p.629

4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14065] 삭제

[1] 국민참여재판으로... / [2] 피해자의 원심법정...

171 p.632

1. - 의의 - ②의 2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X) (17.9급개론)

172 p.633

중단 - 2번째 판례[유죄의 자료가 되는...(대법원 80도1547)] 삭제

173 p.634

5. - 진술의 증명력 - ② 내용 일부 수정 및 기출표시 추가

② 진술에는 진술이.....포함된다. (15.경찰승진)

→ ②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포함된다. (15.경찰승진, 18.해경승진)

174 p.636

1. 의의 - 적용범위 - Tip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

Tip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법원, 18.9급개론)

175 p.637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2006도1944]의 주의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주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X) (17.7급국가)

176 p.639

중단 - 1번째 판례[대법원 60도376]와 2번째 판례[대법원 66도634 전합] 순서 변경

177 p.661

1번째 판례[대법원 85도21] 다음에 판례 추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5423)

178 p.663

5번째 판례[대법원 97도3340]를 p662 2번째 판례[대법원 2009도39] 아래로 이동

179 p.666

1번째 판례[대법원 84도1129]의 Tip 추가

Tip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8.경찰승진)

180 p.667

4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2182] 다음에 판례 추가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21342)

181 p.674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번째 판례[대법원 4286형상186] 다음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다라도 이는 직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14769)

주의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X) (18.법원)

182 p.675

2. - 죄수론 - ② 내용에서 기존 내용을 ㉠으로 하고 아래 내용을 ㉡으로 추가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17.9급개론)

183 p.679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2005도4435] 다음에 판례 추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2016도15526)

184 p.681

2. - 공소시효 완성 - 주의 추가

주의 공소장 기재 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 (18법원)

185 p.684

3. - 선고집행 - ② 내용 다음에 내용 추가

② 이 판결은...(제3항) → ② 이 판결은...(제3항) (확정 전 집행)

186 p.691

상단 - 3번째 판례[대법원 99모40] 다음에 판례 추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모2874) (18법원)

187 p.692

마지막 판례[대법원 4291형상1] 다음에 판례 추가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모1557) (18순경1차)

188 p.706

중단 - 판례[헌법재판소 2004헌가27] 주의 추가

주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 (13.9급국가)

피고인 상소 박스 ②의 주의[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삭제

189 p.707

6번째 판례[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대법원 2010도9151)] 삭제

190 p.708

하단 - 1번째 판례[대법원 98도2550] 삭제

즉결심판에 대하여...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98도2550) (12. 순경1차·경간, 15. 법원)

191 p.709

2번째 판례[피고인이...아니다. (대법원 2003도4732)] 삭제

3번째 판례[[1]벌금형의..., [2]제1심이...(대법원 2004도6784)] 삭제

192 p.711

상단 - 2번째 판례[대법원 89도1477] 다음에 판례 추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도14986)

주의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18.9급국가·개론)

193 p.713

상단 - 1번째 판례[[1] 피고인이..., [2] 벌금 150만원의...(대법원 2009도10754)] 삭제

194 p.715

하단 - 판례[대법원 69도114] 내용 일부 수정

...그 경중을 교량할... → ...그 경중을 교량할...

195 p.716

집행유예 - 배제 - 내용 일부 추가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집행유예를 배제하는 것은...해당한다. (11.법원)

→ ...집행유예를 배제(실형을 선고)하는 것...집행유예를 배제(실형을 선고)하는 것은...해당한다. (11.법원, 17.9급국가·개론, 18.순경1차·9급국가·개론)

집행유예 – 추가 – ②의 3번째 Tip 내용 일부 수정

Tip 징역 6월...(대법원 77도2731) (불이익) → Tip 징역 6월...(대법원 66도1496 전합) (불이익)

집행유예 – 기간연장 – ①② 순서 변경

196 p.741

하단 – 판례[대법원 94도458]를 아래 판례로 교체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선번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6도20069)

197 p.756

1번째 판례[대법원 96도51] 다음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4769)

198 p.759

하단 – 2번째 판례[대법원 95재다14] 내용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

-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2) 위 (1)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도17252 전합) (17.7.17.국가)

199 p.763

3.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내용 모두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3)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재심개시결정은 3일의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다.

200 p.765

4번째 판례[대법원 2012도2938]의 1번째 주의로 추가하고 그 아래에 판례 추가

주의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17.9급국가)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도15782)

※ 피고인은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 p.774

상단 - 효력 박스 - 아래에 판례 추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도1557) (18.법원)

주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 (18.순경1차)

202 p.776

형종 상향의 금지 - ①의 Tip 추가 및 주의 추가

Tip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18.9급국가·개론)

주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18.법원)

203 p.778

II. - 청구권자 - ① 내용 일부 수정

① ...경찰서장(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즉결 제3조) (04.순경3차...15.순경2차)

→ ① ...경찰서장(관할해양경찰서장)..(즉결 제3조) (04.순경3차...15.순경2차, 17.해경2차·해경특채2차)

204 p.779

III. - 1. - 결석재판 - ②의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18.경찰승진)

205 p.782

2. - 확정판결 효력 - ② 내용 일부 수정

②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이를 보존한다.(즉결 제13조)

→ ②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즉결 제13조)

206 p.789

3. - 비공개 박스를 아래 박스로 교체

공개	<p>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법정에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의 심리가 행해지게 된다.(소년법 제48조)</p> <p>주의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X)</p> <p>(17.9급국가)</p>
----	--

207 p.791

상단 - 환형처분 금지 - ①의 Tip 추가

Tip 이를 간과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는 없다. (18.법원)

5. -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 박스 아래에 내용 추가

IV 소년보호사건

관할	<p>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에 속한다.(소년법 제3조)</p> <p>Tip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p>
조사와 심리	<p>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10조)</p> <p>②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p> <p>③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p>
결정	<p>①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2조)</p> <p>Tip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8.순경1차)</p>

208 p.797

(2) - 신청방법 - ②의 Tip 추가

Tip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209 p.798

③ - 각하결정 - ② 내용 다음에 내용 추가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제3항)

불복불가 - 내용 일부 수정

신청을...할 수 없다.(소촉법 제32조 제3항) → 신청을...할 수 없다.(소촉법 제32조 제4항)

210 p.803

(2) - ③ - ㉠의 주의 추가

주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17.9급개론)

211 p.806

(4) - ② 내용 다음에 내용 추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18법원)

2번째 판례[대법원 2010도8591] 다음에 아래 판례 추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도9458)

212 p.812

상단 - 판례[대법원 2014모2521] 다음에 판례 추가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행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사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된 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모1990)